

國際化時代의 市場開放과 産業構造

朴 振 根*

<目 次>

- I. 國民經濟의 經常收支黑字 吸收能力增大 필요성
- II. 國民經濟의 通貨吸收能力增大을 위한 産業構造구축
- III. 産業內貿易指向型 産業構造구축
- IV. 結 論

I. 國民經濟의 經常收支黑字 吸收能力增大 필요성

經常收支가 만성적인 赤字로부터 대폭적인 黑字로 급격히 전환된 1986년 이래 우리경제가 當面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는 經常收支黑字 규모의 適正化 또는 국제수지 흑자의 적정관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經常收支흑자규모의 適正管理란 경상수지흑자증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특히, 물가상승과 他律的 수입증대에 따른 内部的 마찰 등)이 경상수지흑자증대에 따른 諸般사회적 收益을 능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흑자규모를 유지함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動態的 側面에서 中・長期的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이와같이 정의되는 경상수지흑자의 適正規模自體를 여하히 증대시켜 나아갈 것인가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곧 向後 우리국민경제의 핵심과제가 “經常收支黑字吸收能力의 增大”인 것으로 集約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사항들은 매우 多樣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징은 이들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安定的인 經常收支黑字經濟體制에 부응하는 産業構造구축에 그 着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 延世大學校

이다.

이렇게 볼 때 주어진 本 論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經常收支 黑字吸收能力의 증대를 위한 산업구조구축이라는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주어진 論題인 “國際化時代의 市場開放과 産業構造”에서 國際化時代가 경상수지흑자시대를 뜻하는 것으로 볼 때 경상수지흑자에 따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국내시장개방의 구체적 類型과 程度는 산업구조전략에 상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本 論題가 제기하는 문제는 결국 “경상수지흑자시대의 산업구조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經常收支黑字時代에서 黑字吸收能力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産業構造와 그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향 등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극히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國民經濟의 通貨吸收能力増大를 위한 産業構造구축

경상수지의 흑자(및 흑자증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중 가장 핵심적 항목중의 하나는 그것이 국내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흑자흡수능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와같은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경상수지흑자가 초래할 통화량증대를 국민경제가 큰 무리없이 원만히 受容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함을 뜻한다.

경상수지흑자→통화량증대→물가불안과 경상수지흑자→통화량증대→무리한 국내 與信 및 通安證券발행→부문간 資金配分の 歪曲 등 그간의 경험은 경상수지흑자규모의 감축(“적정화”) 및 국내 與信의 간접규제 등의 형태로 對應策모색을 誘導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對應策들은 경상수지흑자흡수능력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보면 근본적 대응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정책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경상수지흑자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단기적 實效도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금융부문의 純國內資産(NDA) + 금융부문의 純海外資産(NFA) = 總通貨(M_2)의 等式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NFA의 증대를 中和시키기 위한 NDA의 억제에만 진력하게 되면 금융부문의 總資産중 NFA의 비중이 계속 증대되고 그 결과 M_2 에 대한 해외부문(foreign component of money supply)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어 금융당국의 독자적인 “金融政策”(즉, NDA의 주항목인 국내어신의 산업간 배분 등)의 餘地는 계속 좁아지 能動的이며 效率的인 금융정책은 어렵게 되고 말 우려가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흑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화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않게 하는 경제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흑자란 예컨대 지속적인 경상수지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日本 및 西獨의 경우처럼 GNP의 4%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1986년 및 1987년 경상수지흑자의 對GNP비율은 각기 4.8% 및 8.3%에 달한 바 있는데, 一部에서는 경상수지흑자의 適正규모를 對GNP비율을 기준으로 日本 및 西獨水準인 GNP의 4%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適正規模의 평가기준(경상수지흑자의 對GNP比率)은 그 나름대로의 合理性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經常收支의 흑자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관련된 통화량운용에 미치는 압력이 경상수지흑자관리에서 1次의인 要素가 되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適正值評價基準은 경상수지흑자규모의 對通貨量比率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表 1>에서 보듯이 경상수지흑자를 가장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日本 및 西獨에 비해 通貨—所得比率이 매우 낮아 비록 경상수지흑자규모를 이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GNP의 4%정도로 낮춘다 하더라도 경상수지흑자의 통화량에 대한 비중은 이들 국가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경우 GNP를 기준으로 한 경상수지흑자의 적정규모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적정규모를 크게 능가하게 되고 이는 우리경제의 通貨吸收能力이 日本이나 西獨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過大評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관계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경상수지흑자=B, 총통화=M₂, GNP=Y, 통화의 유통속도($\frac{Y}{M_2}$)=V로 각기 나타내면 $(\frac{B}{Y}) = (\frac{1}{V}) \cdot (\frac{B}{M_2})$ 에서 V의 값이 크면 클수록, 따라서 통화—소득비율($\frac{1}{V}$)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어진 $(\frac{B}{Y})$

<表 1> 日本, 西獨 및 韓國의 總通貨—國民所得 比率

	日 本	西 獨	韓 國
1980	0.86	0.54	0.34
1981	0.89	0.53	0.34
1982	0.91	0.55	0.39
1983	0.93	0.56	0.38
1984	0.94	0.56	0.37
1985	0.96	0.58	0.39
1986	1.01	0.58	0.40
1987	1.08	0.59	0.41

〈表 2〉 經常收支黑字의 總通貨에 대한 比率($\frac{B}{M_2}$) (단위: %)

	韓 國	日 本	西 獨	대 만
1987년	19.4	3.4	6.4	13.7

下에서 ($\frac{B}{M_2}$)의 값은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국민경제의 통화흡수능력, 즉 통화—소득비율이 매우 작은 것은 그동안 국제수지부문이 통화환수부문으로 기능해 왔을 뿐만 아니라 통화량규제에 의한 물가안정이 항상 다급한 최우선의 경제적 과제로 대두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규모증대에 상응하는 통화흡수능력의 배양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起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경상수지흑자가 통화관리면에 주는 잠재적압력을 경상수지흑자—통화량비율($\frac{B}{M_2}$)로 나타낼 때 1987년의 경우를 택해 韓國, 日本, 西獨 및 대만을 비교해 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결국, 〈表 2〉의 내용은 경상수지흑자가 국내통화운용에 미치는 압력면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의 정도가 日本이나 西獨은 물론 대만의 경우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즉 경상수지흑자규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日本 및 西獨의 수준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모의 경상수지흑자가 국내통화부문에 주는 잠재적 압력의 정도는 (1987년 기준) 日本의 경우보다 2.6배, 西獨의 경우보다 1.5배나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상수지흑자가 통화량에 미치는 잠재적 압력을 기준으로 한 경상수지흑자규모의 適正值는 對GNP比率을 기준으로 평가한 適正值의 38%(日本기준)~67%(西獨기준)에 불과함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경상수지흑자의 통화운용에 대한 잠재적 압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정도는 국제수지의 餘他部門, 즉 資本收支의 내용여하에 따르게 된다. 특히, 日本 및 西獨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경상수지흑자 대부분을 〈表 3〉에서와 같이 資本收支의 赤字(즉, 資本의 純流出)로써 상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綜合收支에 의한 국제수지부문의 실제적인 통화량변동이 總通貨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1986~1987년의 기간중 純流出이 충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년의 경우는 資本收支가 오히려 黑字로 反轉됨으로써 綜合收支黑字의 실제적인 통화증대압력은 경상수지흑자의 그것 이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1988년 10월말 현재 資本收支는 1억 7천만불 흑자로서 이는 1987년중 10월까지의 資本收支赤字 49억 6천만불보다 51억 3천만불 개선된 것임).

이상의 내용이 통화흡수능력증대를 위한 산업구조구축과 관련하여 주는 핵심적 시사점은 (i) 국내 거주자들의 需要構造에 부응하는 産業構造의 구축과 (ii) 이와 동시에 全産業의 輸出依存度減少(또는 “內需産業”의 산업구조상 地位向上)로 集約된다.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흑자전환으로 제기된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어떤 새로운 통화관리기법의 도입이나 금융부문 또는 통화당국만에 의해 극복하는 데에는 명백한 限界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의 근본적 해결을 이룩함으로써 경상수지흑자의 지속적 증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通貨吸收能力自體를 증대시켜야 하며 黑字經濟에 부응하는 經濟構造의 구축이 中・長期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國內需要構造에 부응하는 産業構造구축

그동안 우리 경제는 經常收支의 만성적 赤字下에서(1977년 除外) 경제발전 戰略上 수출구조가 산업구조를 이끌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구조는 국내수요구조보다는 자연히 수출수요구조(해외수요구조)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마련이었고, 그 결과 산업구조와 국내수요구조간의 괴리현상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황하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구조와 국내수요구조간의 괴리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하에서는 兩者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또한 경상수지흑자규모가 크면 클수록 黑字所得(경상수지부문에서 초래된 화폐소득의 증대분 또는 통화의 증대분)의 지출과정에서 그것이 국내물가에 주는 압박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경상수지가 赤字로부터 黑字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즉, 경상수지적자하의 산업구조가 경상수지흑자하에서 요구 또는 이룩되는 산업구조로 미쳐 전환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1986년 이래의 경험적 사실이 잘 立證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수요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와 그러한 산업구조에 기초한 수출산업구조의 구축이라는 극히 기본적인 요건의 충족없이 계속되는 경상수지흑자에 따른 통화증발을 국민경제가 제대로 흡수할 수 없고 급기야는 경상수지흑자규모의 대폭적인 축소에서 대응책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경상수지흑자폭의 감축형태라는 대응책이 갖는 경제안정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對應策은 국민경제가 보다 큰 경상수지흑자를 受容할 수 있는 經濟構造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보완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

조되어야 할 사항은 금융산업, 해외투자 및 시장개방과 관련된 사항이다. (i) 産業構造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서 “産業”은 非金融部門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국내수요구조에 부응하는 산업구조구축문제에서 금융산업도 결코 例外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증대되는 화폐소득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구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산업의 공급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i) 국내수요구조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의 구축과정에서 국내시장개방에서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략적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財貨와 用役(금융 부문포함)의 流入構造는 일단은 국내수요구조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때 국내수요구조와 국내공급구조(산업구조)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문에 더욱 집중적으로 流入되려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개방폭과 속도는 (i) 국내의 자율적인 산업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문에는 그러한 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ii) 요소의 부존상태 등 제반여건상 對內的인 공급조정이 어려운 부문에서는 국내수요구조와 공급구조상의 격차를 補填시킬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이때 後者の 補填기능은 경상수지흑자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비해 前者의 촉매기능은 주어진 크기의 경상수지흑자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後者보다는 前者의 기능이 산업조직적 차원에서 더욱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iii) 海外投資와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經常收支黑字는 對外經濟活動의 결과로써 발생된 國民貯蓄分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貯蓄分은 對外的으로 投資되어야 이의 對內的인 경제순환과정에 대한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表 3〉 日李과 西獨의 國際收支

(단위 : 10억弗)

		경 상 수 지	자 본 수 지	착오 및 누락	총 합 수 지
日 本	1981	4.8	-1.6	0.4	3.6
	1982	6.9	-16.2	4.7	-4.7
	1983	20.8	-21.3	2.1	1.6
	1984	35.0	-36.6	3.7	2.1
	1985	49.2	-53.5	4.5	0.1
	1986	86.0	-73.5	2.4	14.9
西 獨	1981	-5.0	5.2	1.4	-1.6
	1982	3.9	-0.2	-0.8	-0.6
	1983	4.2	-5.9	0.5	-2.2
	1984	8.2	-12.8	3.4	-1.8
	1985	15.7	-17.9	3.1	3.4
	1986	35.8	-31.5	-2.7	3.9

이와같은 원칙에 충실하면 할수록 경상수지흑자는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表 3>에서 오늘날 가장 건설한 경상수지 흑자국들인 日本과 西獨의 경우를 보면 이들 兩國이 이와같은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資本收支의 赤字를 나타내는 資本의 純流出은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써 이의 정도는 곧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國際化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경상수지흑자로 인해 금융부문을 포함한 경제 각 부문에서의 국내시장개방이 自律, 他律的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資本의 純流入이 아닌 純流出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면 금융부문의 발전정도가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는 국내산업구조면에서 금융부문의 위치가 현재 이상으로 크게 강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2. 國民經濟의 財貨 및 用役 輸出依存度 減縮

비록 산업구조가 국내수요구조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경상수지흑자하에서 산업별 생산—수출 비율이 크면 클수록 對內的인 초과수요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국내수요구조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內需・外需産業의 區分이 명확치 못한 현실적 상황하에서는 모든 국내산업에서의 생산—수출 비율이 “충분히” 낮추어져야 한다.

이때 “충분히 낮은 수준”의 평가가 그렇게 容易한 것은 아니나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할때 가장 지속적인 경상수지흑자국인 日本과 西獨의 例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表 5>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1985년의 경우 주요 산업별로 對內的으로 所要되는 自給生産額이 산업별 실제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表 4> 韓國, 日本 및 西獨의 財貨 및 用役 輸出依存度 (단위 : %)

	韓 國	日 本	西 獨
1981	41.2	16.2	
1982	52.5	16.5	32.4
1983	40.0	15.5	31.3
1984	40.8	16.8	33.7
1985	39.5	16.4	35.3
1986	44.0	13.2	32.9
1987	47.4		31.6

(韓國은 1986~87年 經常收支흑자, 日本과 西獨은 全期間 經常收支黑字)

〈表 5〉 韓國의 産業別 自給率과 輸出率 比較(1985) (단위: %)

産 業 區 分	自給生産額 總生産額 (A)	(100-A)	輸 出 額 總生産額
1. 농 립 수 산 품	112.1	(-)12.1	3.8
2. 광 산 품	625.0	(-)525.0	2.8
3. 공 산 품	90.6	9.4	22.5
3. 1 경 공 업 제 품	76.7	23.3	20.0
3.11 식 · 음 료 품	103.0	(-)3.0	2.9
3.12 섬 유 및 가 직	32.0	68.0	43.3
3.13 재 제 및 목 제	100.9	(-)0.9	9.9
3.14 종 이, 인 쇄, 출 판	111.1	(-)11.1	3.8
3.15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01.6	(-)1.6	7.9
3.16 기 타 제 조 업 제 품	41.0	59.0	62.6
3. 2 중 화 학 공 업 품	101.2	(-)1.2	24.5
3.21 석 유 화 학 제 품	99.0	1.0	15.8
3.22 금 속 1 차 제 품	103.7	(-)3.7	17.1
3.23 금 속 제 품 및 기 계	102.2	(-)2.2	35.7
4.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	100.2	(-)0.2	1.0
5. 서 어 비 스 업	92.9	7.1	9.1
全 産 業 平 均	97.8	2.2	14.5

* 韓國銀行, 『1985年度 産業聯關表 作成報告』, 1988, p. 44 및 p. 52를 이용하여 作成한 것임.

* 1985년 日本의 輸出率은, 농림수산 0.4%, 광업 0.9%, 공산품 13.6%, 경공업품 3.7%, 중화학공업제품 17.9%,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 0.0%, 서서비스 2.9%, 全産業平均 7.1%임.

농림수산업 112.1%, 경공업제품 76.7%, 중화학공업제품 101.2%,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 100.2% 및 서서비스업 92.9%로서 광산품을 포함한 全産業平均은 97.8%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산업별 참된 輸出餘力은 농림수산(-)12.1%, 경공업품 23.3%, 중화학공업품 (-)1.2%,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 (-)0.2%, 서서비스업 7.1% 및 全産業平均 2.2%로 평가된다. 그러나 〈表 5〉에서와 같이 경공업부문의 平均値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수출비율은 이들 輸出餘力比率을 크게 능가하고 있고, 특히 輸出餘力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輸出餘력과 실제의 輸出간의 격차는 경상수지가 赤字인 경우에는 輸入을 통해 補填되고 있는 것이므로 對內的인 供給不足문제는 輸入財源이 확보되는 한 심각한 경제불안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일단 어떤 이유로 (특히, 기대되지 않은 돌발적인 外生的 要因에 의해 극히 他律的으로) 경상수지가 赤字에서 급격히 대폭적인 黑字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輸出餘力を 증가하는 輸出은 심각한 경제적 不安要因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경상수지흑자하에서 우리경제의 수출의존도 인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 次元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적정수준의 평가는 별도의 연구과제인 것이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表 4>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1986년 이래 수출의존도는 (日本 및 西獨의 경우와는 반대로) 1983~1985년중의 수준보다 연간 10%씩(즉 4% 포인트씩)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며, 따라서 경상수지흑자가 초래하는 内部的 不安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主要因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과대한” 經常收支흑자가 유발되는 内部的 不安 극복을 위해 경상수지흑자의 對GNP比率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같은 대응방안이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불가피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경상수지흑자규모의 對통화량比率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경상수지흑자의 對GNP比率을 국내 시장개방(즉 財貨와 用役의 輸入증대)을 통해 이룩하는 경우 그것은 하나의 縮小均衡의 接近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민경제가 受容할 수 있는 통화량의 증대를 통한 국민경제의 경상수지흑자흡수능력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즉, $\frac{B}{M_2}$ 에서 B의 감소가 아닌 M_2 의 증대로 $\frac{B}{M_2}$ 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과 보완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결코 시장개방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둘째, 우리경제의 輸入商品構造로 보아 비록 經常支給의 主從인 財貨의 輸入확대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경상수지흑자규모의 감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경상수지흑자의 對GNP比率이 목적했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 특히 두 번째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재화와 용역의 수출과 수입을 각기 X와 M으로 나타낼때 $\frac{B}{M_2} = V \cdot \frac{B}{Y} = V \left(\frac{X}{Y} - \frac{M}{Y} \right)$ 에서 財貨시장의 개방을 통해 M이 증대되는 경우를 보자. 현재 우리의 商品輸入構造는 1987년과 1988년(1~10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재수입 9.5%, 원자재수입 55%, 자본재수입 35.5%로 나타나고 있어, 輸入의 대부분이 中間投入物이다. 따라서 輸入의 증대는 그것이 소비재수입에 국한하지 않는한 소위 乘數倍의 생산증대효과를 초래하게 되어(1985년 산업연관분석에 입각할 경우 全産業平均 輸入 中間財投入係數는 0.13으로서 이는 輸入中間財가 平均 7.7倍의 生産誘發效果를 낳

게됨을 말해주고 있음) 輸入—生産比率 및 국제수지상의 經常支出—國民所得比率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실상 이와같은 결과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輸入自由化와 국내시장개방이 촉진된 1986년 이래 $\left(\frac{M}{Y}\right)$ 比率이 오히려 감소된 점으로 충분히 立證되고 있다(1981년 49%, 1983년 43%, 1985년 41%, 1986~1987년 40%).

이렇게 볼 때, 국내시장개방은 그것이 自律的이건 他律的이건간에 消費用財貨와 用役에 100% 국한되지 않는 한 경상수지흑자의 對GNP比率을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고, 따라서 $\left(\frac{B}{Y}\right)$ 의 값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left(\frac{X}{Y}\right)$ 의 감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left(\frac{X}{Y}\right)$ 의 감소를 위한 方案은 과연 무엇인가. 국민경제의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수출증대보다 빠른 속도로 內需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른 생산증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內需增大를 통해 기업부문의 內需充足을 위한 생산·판매활동증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기업부문의 國內供給比率증대가 반드시 수출의 절대적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산업에 따라서는 수출의 절대적 감소가 적어도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內需증대와 그에 따른 기업부문의 內需供給증대를 위한 方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매우 多樣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기업부문이 수출활동에 따른 利潤率에 못지않은 利潤率을 국내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條件을 조성해 주는 것이며, 이는 다시 기업부문의 꾸준한 原價節減노력을 前提로 할 때 租稅 및 金融 등 諸面에서 거주자들의 對內的인 支出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에서 기업부문의 國內供給比率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절대공급능력의 신속한 증대가 요구되고, 이는 다시 投入增大를 필요로 하므로 投資저해요인의 제거 내지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典型的인 支出轉換政策수단인 국내통화의 平價切上이 수출의존도 감축 효과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도 국내지출증대는 보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1987~1988년 중에는 명확히 예상되는 원화의 平價切上の Leads and Lag 현상에 의한 “밀어내기 수출”과 “수입지연” 등으로 오히려 무역수지흑자와 貿易外收支黑字規模를 증대시켜 왔고, 특히 純移轉輸入의 급속한 증대를 초래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2년간에 걸친 平價切上の 이와 같은 소위 destabilizing speculation 과정에서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限界輸出企業들은 內需供給위주의 착실한 기업으로 신속

히 전환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平價切上과정에서 수출가격인상에 성공한 優良企業들도 平價切上이 계속되는 경우 국내시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平價切上의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기업들에게 국내시장에서의 수요증대 형태로 강력한 私的 利潤動機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平價切上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보완적인 對內支出증대의 정도는 커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對內的인 支出억제완화정책과 平價切上이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즉, (i) 국내총지출의 증대는 국내물가불안을 초래하고, (ii) 총지출의 증대 및 그와 병행되는 平價切上은 輸入需要증대를 유발하여 국내기업부문의 內需充足노력의 動機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점중 물가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視角의 조정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물가의 상승은 모든 산업의 內需供給比重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 요인으로써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국민경제의 궁극적인 安定化를 위한 構造的 基盤을 구축하는데 과도기적으로 所要되는 불가피한 社會的 費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課題는 初期의 물가상승(예컨대, 초기 2~3년간 10%이내의 소비자물가상승)이 폭넓은 社會的 物價不安心理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調整政策手段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上記한 문제중 두 번째 문제인 輸入需要의 急増으로 “內需産業”의 투자, 생산 및 판매활동증대에 대한 動機가 除去되고 말 가능성의 정도는 우리의 輸入政策 즉, 市場開放戰略과 直結된 사항이다.

이미 앞서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국내시장개방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 폭과 정도가 우리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촉매제로써 활용되어야 할 측면과 국내의 경제안정과 경상수지흑자의 적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때 前者는 주로 競爭型輸入과 後者는 주로 非競爭型輸入과 각기 관련된 것으로 볼 때, 경상수지흑자시대에 요구되는 산업구조전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극히 資源集約的인 一部の 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기술축적과 투자능력의 증대과정에서 非競爭型輸入의 잠재적인 범위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잠재적인 競爭型輸入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는 品目の 범위면에서 국민경제의 競爭型輸入에 대한 구체적 의존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이제까지 논의한 산업구조구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向後 우리의 산업구조적 과제는 수많은 잠재적 競爭型輸入品目들중 구체적으로 어느 品目들을 국내산업육성을 위한 단순한 촉매제로서 활용하고 어느 品目들을 非競爭輸入品目の 경우와 같이 완전開放할 것인가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당연히 위에서 제기한 문제인 輸入需要增大가 초래할 否定的 效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제기되는 산업구조개편방향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논의된 산업구조 조정방향의 일환인 것이며 결코 그것과 相衝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Ⅲ. 產業內貿易指向型 產業構造구축

우리경제가 向後 指向해야 할 산업구조는 高度化와 多様化이다. 물론 “산업구조 조정”의 2大要素인 이 모두는 同時的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사항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最小化인 것이다.

여기서 지적되는 사회적 비용이란 對內的인 경제 및 非經濟的 費用뿐만 아니라 經濟交流 相對國들과의 산업구조상 競爭性에서 오는 각종 外部的 마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때 向後 추구되어야 할 산업구조의 高度化와 多様化의 내용은 주요무역상대국과의 產業內貿易(intra-industry trade)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그에 따른 산업내무역증대의 잠재적 범위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효과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의 정의문제를 다시 想起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우리의 산업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산업”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分類上の 문제인 것이다. 크게는 金融產業과 非金融產業, 農林水產業과 非農林水產業, 內需產業과 輸出產業, 交易財產業과 非交易財產業 등으로 산업을 분류할 수 있는데 비해 좀더 세부적으로는 SIC나 SITC 또는 CCCN의 3~4 digit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CCCN 7 digit기준에 상응하는 산업분류도 가능하다.

그런데 對內的인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高度化 및 多様化와 對外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역유형의 동시적 개발이라는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산업분류의 기준은 CCCN 3~4 digit이상의 細分類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조업부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CCCN 4 digit에 상응하는 “산업”의 수는 약 1,000개에 달하고 있고 CCCN 7 digit에 상응하는 “산업”의 수는 10,000개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CCCN 4 digit을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다고 할때 CCCN 7 digit을 기준으로한 각 개별산업의 構成品目(components of the industry)의 수는 산업당 평균 10개를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개별 “산업”을 이같은 기준에서 정의할 때 주요무역상대국들과의 산업내 무역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구조의 高度化와 多樣化의(따라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요구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양화의) 1차적 내용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주요”산업에서 각 산업별 구성품목이 質的으로 向上되고 數的으로 增大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입장에서 볼때 비록 결과적으로는 같게 되더라도 “industrial structure의 고도화와 다양화”보다는 “structure of the individual industries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위한 接近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산업별로 과연 어떠한 品目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산업별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룰때 산업내무역의 정도는 極大値에 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기존의 輸出特化産業(수출—수입비율이 1을 증가하는 산업)에서는 수출품목의 수를 줄이더라도 품목의 고급화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반면 기존의 輸入特化産業(수출—수입비율이 1을 下廻하는 산업)에서는 구성품목의 고급화와 다양화의 동시적 추구로 수입품목의 수를 줄이고 수출품목의 수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¹⁾

- 1) 참고로 重化學工業부문에서 산업별 韓國의 對日本 산업내 무역의 실제치와 잠재치간의 격차가 韓國의 산업별 對日本比較優位性의 실제치와 잠재치간의 격차에 의해 결정되고, 이때 後者는 다시 韓國의 개별산업별 수출품목구성과 수입품목구성의 日本의 수입품목구성과 수출품목구성에 비한 상대적인 非類似性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left(\frac{B}{B^*} \right) \text{의} \left(-\frac{C}{C^*} \right) \text{탄력성} : 0.569 (t=15.87)$$

$$R^2=0.51, F=251.9, D-W=1.66, \text{산업의 수}=243$$

여기서 B 와 B^* 는 산업내 무역지수(Glueck-Lloyd지수)의 실제치와 잠재치를, C 와 C^* 는 韓國의 산업별 對日本 比較優位指數(수입—수출비율)의 실제치와 잠재치를 가리킨다.

$$(ii) \left(-\frac{C}{C^*} \right) \text{의 輸入품목구성의 상대적非類似性指數 탄력성} : 0.844 (4.61)$$

이러한 接近은 극단적 형태인 日本式의 “full-set”型 산업구조의 短點을 피하면서 기존의 加工貿易型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산업구조의 장기적인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 품목의 선정은 1차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기준으로 하되, 그것이 주요무역상대국들의 수입수요와 일치하는 품목에 最優先順位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면에서 절대공급능력의 限界性이 자원의 부존상태 등으로 보아 명확히 예상되는 품목 등은 비록 국내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經常收支黑字經濟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黑字의 適正管理는 결과적으로 경상수지흑자의 국민경제에 대한 상대적 규모를 소위 “適正”水準으로 낮추는 것이나, 이와 병행하여 국민경제의 通貨吸收능력을 신속히 증대시켜야 한다. 사실상 前者를 낮추는 것이 곧 後者の 증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黑字經濟下에서 요구되는 것은 後者の 증대이므로 前者를 日本 및 西獨의 水準(약 4%)으로 낮추었을 때 後者 또한 이들 선진국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後者の 증대에 보다 큰 정책적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課題의 해결은 金融當局이나 金融部門만의 노력으로 이룩될 수는 없는 것이며 금융부문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구조적 개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구조적 개편은 自由市場機構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그에 따르는 社會的 費用(經濟的 費用 및 非經濟的 費用)의 최소화와 시간절약을 위해 補完的인 政策的 介入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市場開放문제는 이러한 국내산업구조개편과 구조적으로 직결된 것으로서, 특히 산업구조의 조정은 시장개방을 前提로 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

$\left(\frac{C}{C^*}\right)$ 의 輸出품목구성의 상대적非類似性指數 탄력성 : $(-)0.545(-3.27)$

$\left(\frac{C}{C^*}\right)$ 의 산업내교역조건 탄력성 : $(-)0.07(-0.60)$

$R^2=0.13$, $F=9.0$, $D-W=1.69$, 산업의 수=186

여기서 輸出入품목구성의 非類似性指數는 R.J. Jonston의 indices of functional specialization in export and in import (The World Trade System, St. Martin's Press, N.Y., 1976, p.36)이며, 本 推定結果는 拙著, “Intra-Industry Trade in the Pacific Basin; Major Determinants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and Potential Degree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Reports to the IDRC, Canada (1988)의 一部임.

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장개방이 아무리 그것이 外部的 要因에 의한 他律的 側面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폭과 속도 등은 自律的인 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시장개방의 補完的 機能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는 소위 國際化나 開放化時代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전반의 能率性向上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先行要件은 對內的으로 존재하는 각종 歪曲의 시정을 통해 私的 費用과 社會的 費用간의 괴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產業構造調整課題의 달성을 위해 우리사회가 社會的 費用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지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고 냉철한 社會的 判斷이 있어야 할 것이다.